

유로존 재정 위기 심화... 건설산업 영향 어느 정도인가

빈 재 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jipins@cerik.re.kr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0년 4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2010년 11월에는 아일랜드, 2011년 4월에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2012년 6월에는 스페인에 구제금융이 제공됐다.

유로존의 중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재정 위기 상황에 접어들면서, 유로존 회원국들이 겪는 재정 위기의 성격에 대한 진단도 유동성 위기에서 부채 위기로 바뀌었다. 즉, 유동성 위기는 채무국이 경기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한 경제 위기 국면이 지나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고 재정

위기도 해소될 테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 찾아야 한다는 점이 우세해지면서 근거를 잃고 있다. 즉, 유로화 사용으로 인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유로존 내부에서 산업 경쟁력이 낮은 국가에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유로존 역내 교역의 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는 한 경쟁력 열위 국가들의 채무 상환 능력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로존 재정 위기는 유로화의 존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 위기의 본질은 유로화 존속

의 대가를 누구 지불할 것인가, 즉, 채권국이 부채 탕감을 통해 지불할지 혹은 채무국이 재정 지출 축소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불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달리 표현하면, 유로존을 설립하면서, 설립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적 결함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 통화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보완 과정에서 재정 위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로존 재정 위기의 원인 진단

유로존 재정 위기의 원인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특히 유로존 국가들에서 금융 안정화

경영 정보

조치 및 확대 재정정책의 시행, 그리고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 자금 동원이 필요하였는데, 금융 위기로 인해 신용 위험에 민감해진 금융시장은 회사채나 주식에 비해 안전 자산인 국채를 선호함으로써 각국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를 원활하게 소화하였다.

하지만 각국 국채 물량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이는 국채시장에서 발행국 정부의 재정 수지, 부채 규모, 경제 성장 등에 따른 수익률의 차별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10월 총선에서 새로 집권한 그리스 정부가, 이전 정부가 발표한 재정 적자를 수정하여 발표하자 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러한 우려가 유로화 존폐 문제로 이어짐으로써 이후 세계 경제의 전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유로화 존폐에 대한 위기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위기를 통해 유로존은 기존의 통화 통합에서 일정 정도의 재정 통합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경제 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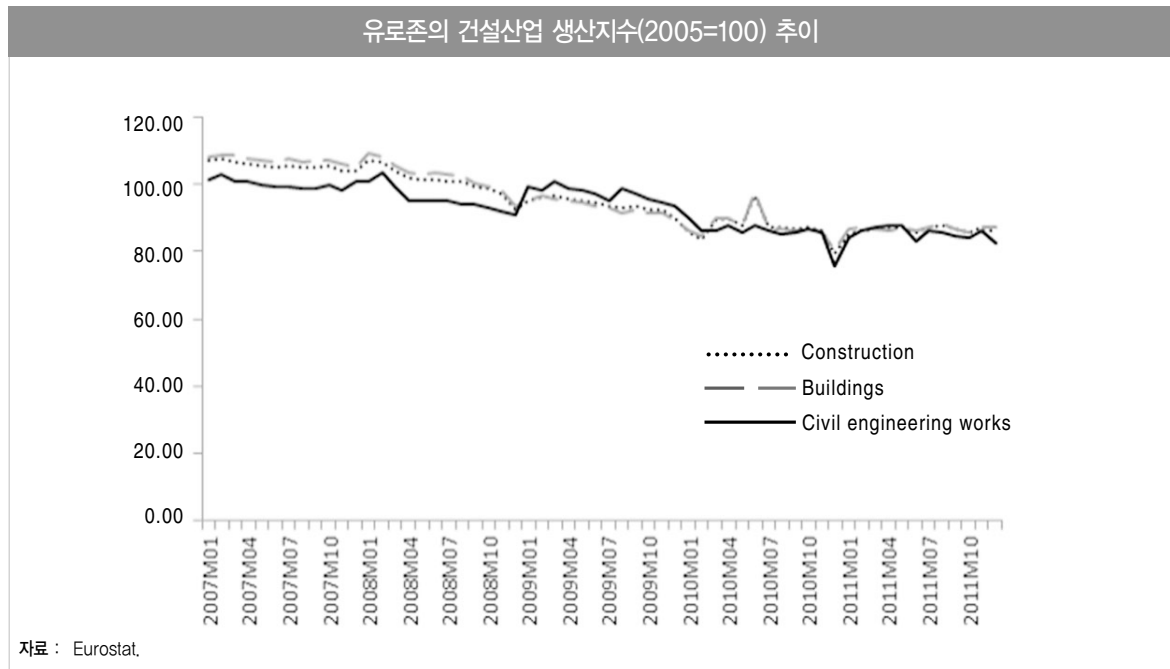
금융 위기와 재정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유럽금융안정장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와 유럽 금융안정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를 계승할 상설 기구, 유럽 재정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설립이 2012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

2012년 3월에 체결된 재정안정화 협약도 201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유로 본드의 도입이나 재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로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경기 동행 지표가 되는 유로



존 17개국의 건설산업 생산지수 (2005=100)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2007년 2월에 107.69의 최고값을 보였고 2010년 12월에 79.60의 최저값을 보였는데, 최저값은 최고치 대비 26.1% 하락한 수준이다.

건축부문 생산지수의 경우 그래프 상으로 건설산업 생산지수와 대부분 겹친다. 최고치는 2008년 1월의 108.98이고, 최저치는 2010년 12월의 80.34인데, 최저치는 최고치 대비 26.3% 하락한 수준이다.

토목부문 생산지수는 2008년 2월 최고치 103.57을 기록했고 2010년 12월 최저치 75.56을 기록했는데, 최

저치는 최고치 대비 27% 하락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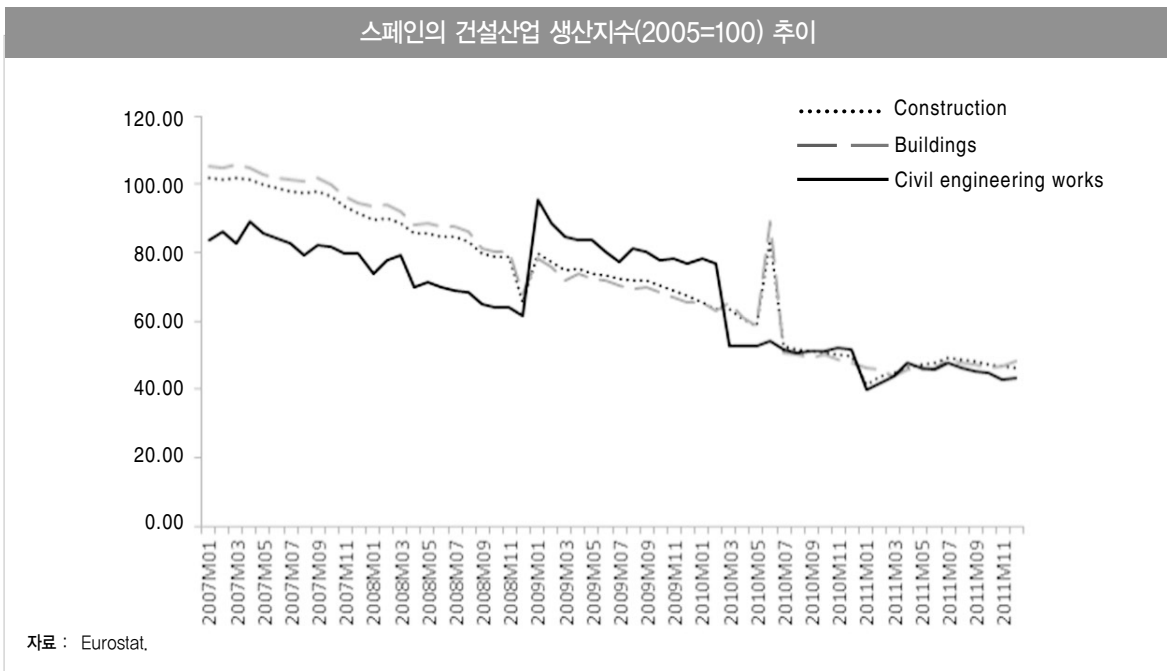
토목부문 생산지수의 경우, 금융 위기 발발 이후 EU집행위원회와 유로존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를 확대한 것을 반영하여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재정 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생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 에너지, 안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렸는데, 특히 브로드밴드와 에너지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50억 유로, 에너지 효율 빌딩 관련 사업에 10억 유로 등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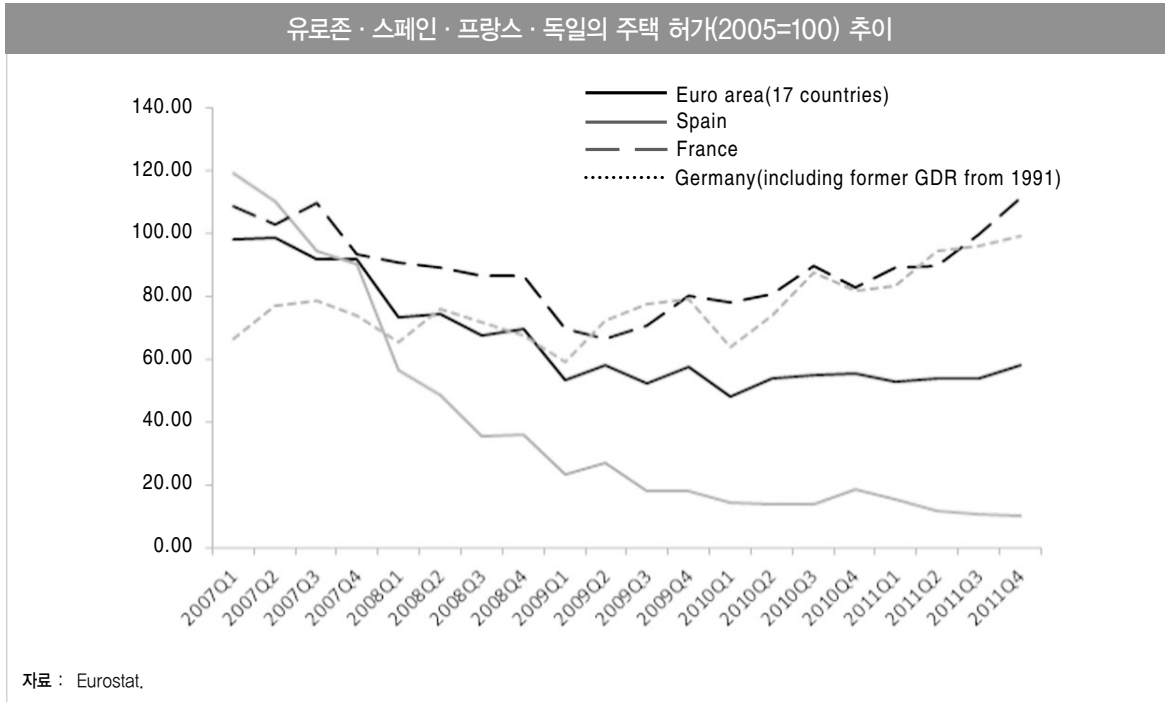
독일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책정한 500억 유로 중에서 180억 유로를 도로, 철도, 학교, 대학 등 중앙 정부 또는 각급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근대화에 투자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화 및 근대화 등을 위해 주택, 녹색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 등을 채택하여 실행하였다.

프랑스는 105억 유로를 투자하여 10만 채의 사회 주택을 건설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0% 대출을 확대하고 19억 유로를 주택 건설과 개량 사업에 투자하였다.

스페인은 신규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80억 유로를 지방 정부



경영 정보



에 분배하고 주택경기의 악화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건설산업에 대한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시행 이후 유로존의 재정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유로존의 건설산업 생산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정체 기간을 겪고 난 뒤, 2011년 말에 다시 침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사례

유로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회원국별로 구분할 때 가장 기여가 큰 스페인(2007년 기준)은 금융 위기 과

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심하게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축부문은 2010년 상반기 정부 지원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급상승한 시기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목부문은 금융 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포함하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시행을 반영하여 2009년 생산지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정 위기 발발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였고 현재까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 지표가 되는, 유

로존의 주택 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2분기에 98.93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0년 1분기에 47.96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최저치는 최고치 대비 51.5% 하락한 수준이다. 2010년 2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던 주택 허가는 2011년 4분기에 약간 상승하면서 개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유로존 국가별로 분류했을 때, 비중이 가장 큰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건축 허가 추이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 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유로존 주요 국가의 주택 허가(2005=100) 최고 및 최저치, 변동 폭 비교

국가	위기 전 최고치	최저치	변동 폭	최근치(2011. 4Q)
스페인	119.15 (2007.1Q)	10.44 (2011.4Q)	91.2%	10.44
프랑스	110.00 (2009.2Q)	66.47 (2009.2Q)	39.6%	111.60
독일	78.62 (2007.3Q)	59.13 (2009.1Q)	24.8%	99.22

자료 : Eurostat.

직접적으로 심한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경우, 건축 허가는 최고치(2007년 1분기, 119.15) 대비 최저치(2011년 4분기, 10.44)가 91.2% 감소하였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1년 4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2007년 이후 등락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금융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 위기 이후 주택 허가가 축소하였으나 단기간에 회복하여 2011년 4분기에는 이미 2007년 수치

를 이미 초과하여 건설경기가 위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 위기와 국내 건설산업

유로존 재정 위기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여 금융 위기 이후 이미 위축된,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부동산 PF와 가계의 주택 수요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라 민간 건설시장의 축소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질에 따른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복지 지출의 증가 추세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축소를 의미하고 이는 공공 건설 물량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유로존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또는 저성장은 한국의 수출 침체를 의미하고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통해 건설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균형 재정에 대한 강조로 인해 재정 자금을 동원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대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 건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CERIK

국내 건물건설투자 추이

